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1월 14일 (목)

**CONTENTS**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IB 2021-01)

---

## CONTENTS

I.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1

II.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12

III.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 20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1월 14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이번 호(1월 2째주)는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인구정책 대전환, ▶모빌리티 산업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제1편: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1.5(화)부터 평양에서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해, 현재(1.12) 진행 중임. 대회 7일차인 1.11(월)까지 릴리스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의 경제실패 인정, △당내 군부 의석 대폭 축소, △당 규약 개정(‘선군정치’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제시),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 및 조직 개편 등임.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1.9(토) 사업총화에서 “SLBM 핵잠수함의 공식화”를 선언한 것인데,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핵무력 고도화’에 두는 한편, 美의 레드라인을 건드려 대미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아울러, 남북관계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바, 대남타격용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쏟아내고 있어, 국면전환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임. 이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제2편: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김창배 경제정책실장)

인구감소는 경제절벽, 재정고갈, 지방소멸 등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 하지만 정부의 인구대응·대책은 위기의식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안일. 사상 처음 인구감소 통계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전환의 시급성을 시사. ▽세금퍼붓기 출산 대책을 지양하고 결혼·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회환경 및 구조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투입 감소 상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 정비 ▽지속가능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 **제3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념.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가 의미 없는 파괴적 혁신이 만들어 내는 산업-생활-정부 간 상호연계의 형태로 규정됨.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2030', '모빌리티 2040'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연결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함

## II.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작성: 김창배 경제정책실 실장 (kim.chang.bae@ydi.or.kr)

인구감소는 경제절벽, 재정고갈, 지방소멸 등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 하지만 정부의 인구대응·대책은 위기의식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안일. 사상 처음 인구감소 통계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시사. ▽세금퍼붓기 출산대책을 지양하고 결혼·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사회환경 및 구조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적극적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 투입 감소 상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 정비 ▽지속 가능 시장형 일자리 창출로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 1. 현황: 2020년 주민등록 인구, 사상 처음으로 감소

□ ‘인구 레드 크로스(dead cross)’<sup>4)</sup>발생<sup>4)</sup>, 1인 가구 39.2%로 증가

※ 출생아가 사망자에 미달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 (51,849,861명) 대비 20,838명 감소

- 2020년 출생자 수는 30만 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로 하락한 데 기인

○ 1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세대는 감소세 지속

- 전체 세대는 2020년에는 23,093,108세대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4)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

큰 폭(611,642세대, 2.72%) 증가

-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3,362세대, 39.2%)를 돌파
- 1, 2인세대는 전체의 62.6%

□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

- 이민자 유입이 없다면 노동력 감소 → 생산 및 소득 감소 → 소비 위축 등 경제절벽의 악순환 초래
- 또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령인구에 대한 젊은 층의 연금과 복지 부양 부담 급증을 초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의 기력을 떨어뜨려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표 II-1〉 생산연령인구의 노년부양비

단위: 명

	2018년	2030년	2050년	2067년
총부양비	19.6	38.2	77.6	102.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중

## 2. 문제점 : 정부 대응에 위기 의식 부재

### □ 영아수당, 출산 지원금 확대 등 단기 땀질 처방에 급급

○ 여전히 정부는 ▽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sup>5)</sup>

- 지난 15년 동안 무려 1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못낸 기존 대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
- 반면 출산의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낮아진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일뿐

※ 합계출산율 :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 2018년 기준 OECD 37국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에 크게 밑도는 수치

〈표 II-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합계출산율	2.82	1.57	1.48	1.23	1.24	0.98	0.9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5)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

□ ‘노인 알바’와 같은 땀질 처방만 남발

- 공공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고령자 고용은 오름세이지만 주로 단순노무 업종에 치중하면서 노인 빈곤율 개선에 한계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5.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6%), 서비스·판매 종사자(17.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3.5%) 순으로 나타남<sup>6)</sup>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득향상 효과는 제한적

〈표 II-3〉 2019년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취업자	비중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65세 이상	2,538	5.5	3.0	17.7	24.6	13.5	35.8
전체	27,123	22.0	17.5	22.7	4.9	19.9	13.0

자료: 통계청

-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집계
  - 이 수치는 15~64세의 상대적 빈곤율(11.8%)보다 4배 가까이 높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
  - 2017년 기준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0%로 미국(23.1%), 독일(10.2%) 프랑스(3.6%), 노르웨이(4.3%) 등을 크게 상회
  -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 비중

6)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 연금개혁 방치하며 재정고갈 외면

- 고령인구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2년이나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차기 정부로 이월
  - 2018년 4가지 연금개혁방안<sup>7)</sup>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
  - 이후 정부와 국회가 단일안 마련을 서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은 공회전만 거듭
  -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금 개혁은 사실상 좌초
- 이러한 사이에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시기는 점점 빨라짐
  - 국회예산정책처(2020년)에 따르면 연금개혁 못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예상되었던 고갈시점 2057년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

## □ 1인 가구 급증에 대한 대책 미흡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돌봄, 고독사 예방 등 한정된 영역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계층 및 형태의 1인가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미흡
  - ※ 1인 가구 비중: 33.3%(2010년) → 39.2%(2020년)
- 또한 1인 가구의 급증추세를 도외시 한 채 수요억제 일변도의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주거복지가 악화됨

7) 현행 유지를 포함해 보험료율을 12~13%,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것이 핵심.

### 3. 시사점 :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정책방향 대전환 시급

#### □ 실패한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육아·출산 여건 개선을 넘어 주거, 취업, 교육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그 영향이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 강화

-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노력 강화
  - 직업 훈련 및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 노사관계 정상화, 법·제도 선진화, 기술친화적 정책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
  -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자본스톡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복지·연금 정책의 정비

- (주택) 수요기반의 점진적 약화 가능성을 감안해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개발로 주택 공급정책을 전환

○ (복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급자 급증에 대비한 증장기적인 ‘지출 관리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한편 고령자들을 위한 중요한 노후안전망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는 포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될 필요<sup>8)</sup>

○ (연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약화를 국민에게 알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sup>9)</sup>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정부나 국회가 연금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할 필요

〈표 11-4〉 주요국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사례<sup>10)</sup>

국가	개혁 내용	주체	사회적 합의
영국	수급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	정부, 위원회	제3의 기구인 ‘연금위원회’ 활용
스웨덴	1998년 급여수준을 조절하는 ‘자동재정균형조정장치’ 도입	의회	정당 간의 합의 도출
일본	2004년부터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매년 0.345%씩 인상	정부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독일	2029년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정부	노조와 전문가 활용
캐나다	2019년~2023년 보험료율 9.9%→11.9%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동반 인상	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상

8) 국회입법조사처, 『2020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4권』

9)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

10) 국민연금연구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2019)

## □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

- 노인 일자리의 활성화가 단순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
  - 고령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민간 일자리, 그리고 단순 복지형 공공 일자리에 몰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
- 공공일자리 확충보다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함
  - 그래야 소모성 공공일자리가 아닌 인적자본이 개발되고 시장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가능
-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선 필요
    - 임금 체계, 취업자 연령에 관한 제도, 취업알선제도 등 개선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